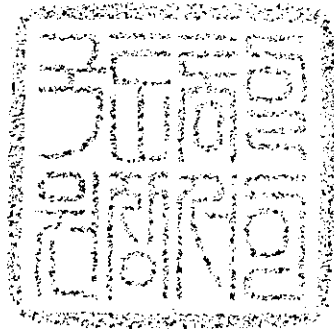


# 남북한장벽의 단계적 제거 방안



1971. 2.



1. 전제조건에 관한 고찰	3
2. 8·15 선언의 문제 제기	6
3. 단계설정과 객관적 조건	10
4. 남북간 직접대화 「루트」의 개설	15
5. 남북교류에 관한 논의와 자세의 변천	19
6. 남북교류의 문제향복	25
7. 비정치적 문화교류의 선봉될 기자 . 언론교류	30
8. 남북교류의 단계적 발전방책	34
(    결    언    )	37



## 1. 전제조건에 관한 고찰

민족에 대한 개념규정은 문화의 정의처럼 다양하다. 하지만 민족을 우선 문화적 통일체로 보며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운영공동체라고 고찰하는데는 거의 이론이 없다.

문화의 정의도 오늘날의 통설은 민족과 같은 기초사회를 특징짓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생활양식과 제도 및 습관, 기술, 집합포상, 신조 및 가치관의 통일체로서 고찰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단일한 민족내부에서 구태여 남과 북의 「문화교류」를 거론해야 한다는 것은 서할뿐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1945년의 국토양단 이후 4반세기를 경과하는 동안 한국의 민족문화는 남과 북을 인위적으로 차단해 놓은 북위 38도선 내지 휴전선을 사이 두고 오직 과거의 역사적 문맥과 전통적인 민족의식, 언어의 공동 또는 추상적인 통일의욕에서만 그 동질성을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하기에 과거 수천년에 걸쳐 동일한 문화권에 소속되어 운영공동체를 영위해 온데서 뿌리내린 동족의식과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생활양식의 유사성은 불과 수십년 뿐인 단절을 꿰뚫고 앞으로 안전한 문화적 개종합을 신속히 이룩할 좋은 바탕으로 되리라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통일접근노력의 필수불가결의 보충로 되는 남·북한 사이의 문화교류는 아직껏 착수되지 않았다. 앞으로 그 교류가 시작된다 해도 처음에는 외국간의 문화교류와 질적으로 별차 없겠고, 다만 언어, 풍습 등의 공유가 보다 더 빠른 「템포」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게 한다.

북수의 외국간의 문화교류의 경우 양대 착안이라고 강조되는 두 가지 것은 (1) 자체의 언어, 사고방식, 문물의 타국에 대한 확연적 보급과 (2) 조국경적 친화감 또는 전 인류적 유대의식을 일깨우게 하면서 타국의 교육, 과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지향이라고 설명되는 것이 예사이다. 한국(남한)의 대북 문화정책도 그 기초에 서는 거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한국(남한) 주체, 북한 농포해방 방식의 조국통일을 원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포현에 의하면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민주주의가 북한으로 넘쳐 흐를 때 그것이 곧 통일의 길입니다」<sup>(1)</sup>고 요약된다. 요컨대 목적 지향성 없는 막연한 남북교통, 상호이해의 증진 등은 거의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승리 또는 우월성, 실증이야말로 북한동포들을 잘 살게 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신조이다. 다른 한편 북편은 그들나름으로 정반대의 지향을 철석상 유사한 논리구성으로 즉 「주체」적으로 강변해 왔다. 예컨대 김일성은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 앞에는 두개의 혁명과업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하나는 우리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sup>(2)</sup>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 경우에 「해방」이라는 말은 상대측의 존재를 인정치 않으려

---

주 (1) 박정희 대통령 연두교서, 1967년 1월 17일자

(2)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평양, 1965, p. 12

는 말소의 지향임이 분명하다. 다만 한국(남한)은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려는데 대해 북괴의 현단계 통일정책은 폭력적 방법을 통한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추구하려는 점이 뚜렷하게 대조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서슴치않는 형편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조선노동당의 주장은 철저한 반미 투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미제와의 이러저러한 「타협」이라든지 사회제도의 이른바 「평화적 이행」에 관한 「이론」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전 인민적 항쟁으로 미제와 그 주구도당들을 타도하고 자기 손에 정권을 틀어쥐게 되면 북반부의 사회주의역량과 남조선의 민주주의적 역량과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은 평화적으로 달성된다」<sup>(3)</sup>는 2단계전략이다.

그러한 북괴측 자세는 남·북한간의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전제조건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을 금지 못하게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외국간의 문화교류라도 그 전제조건은 평화공존에 관한 상호합의이며 나아가서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에 관한 공통지향이다. 양단국가의 경우는 최소한 무력사용 및 폭력진복 시도의 포기를 통한 긴장완화 지향으로 될 것인데, 이 선행조건 없이는 문화교류란 한낱 이상론임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적대적 불신과 유혈적 충돌속에 문화교류의 전개를 말할 수는 없다.

주 (3) 김병식, 현대조선의 기본문제, 동경, 1969, 일문판, pp. 332-3.

그와같은 고찰에 비추어 박정희 대통령의 1970년 「8·15 선언」에 천명된 평화통일접근구상이 남북한 장벽의 단계적 제거작업의 대전제로서 북괴 김일성집단에게 긴장완화를 위한 성의포시를 촉구한 것은 당연하고도 현실적인 논리의 전개라고 볼만하다.

## 2. 「8·15 선언」의 문제제기

박대통령은 제 25주년 광복절 경축사(1970년 8월 15일)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접근방법에 관한 구상」을 말함에 있어 우선 「긴장상태의 완화없이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불 보장하는 북괴의 명확한 태도포시와 그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 대전제 위에서 북괴에 대한 두가지 조건제시에 붙여 한국(남한)측의 상응한 조치장구를 시사한 것이다.

첫째로, 「북괴는 무장공비 남파 등의 모든 전쟁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하는 점을 명백하게 내외에 선언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합니다」<sup>(4)</sup>고 하였다.

- 그 조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 -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에 가로 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

주(4) 박정희 대통령, 제 25주년 광복절 경축사, 1970년 8월 15일자, 정부간행물, p. 10.



획기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sup>(5)</sup>가 있다고 한 것이다.

둘째로 「북괴가 한국의 민주·통일·독립과 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하는 조건에서라면

- 한국정부로서는 「유엔에서의 한국문제토의에 북괴가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sup>(6)</sup>이라고 한 것이다.

나아가서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북괴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괴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sup>(7)</sup>이라고 하였다.

우선 첫째 조건 및 상응조치 시사불 불적에 북괴에 대하여 단순히 무력사용의 포기만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주력 핵명론도 포기해야 한다고 한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북괴 입장에서는 무력사용 포기만이라면 형식상 응할 수도 있다. 그들은 1950년대의 한국전쟁마저 마치 그들은 남침안했으며 남에서 북진하니 「자위」상 대응한 것 처럼 주장해온 철면피성을 보였었다. 그러나

---

주 (5) Ibid.

(6) Ibid., p. 10-1.

(7) Ibid., p. 11.

폭력혁명론을 포기하라고 할적에 그것은 북괴 김일성 체제의 사상적 기초의 붕괴를 의미하며, 동시에 북괴가 앞으로 본격화하려는 비정규전 또는 「인민전쟁」 시도를 사전에 폭로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조건의 수락은 현재 북한 주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는 김일성체제의 퇴장 또는 붕괴 후 북한에서의 내부변화가 뚜렷한 자유화·민주화를 실증한 연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 점에서 「8.15 선언」의 조건제시는 거시적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어쨌든 앞으로 북괴 공산집단이 첫째 조건을 받아들인다고 상정할적에 한국(남한)은 상응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한 것이다. 이 경우에 「남북한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란 무엇을 염두에 둘 것일까.

「인도적 전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실명이 덧붙여진 점에서 상당한 시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완전통일 이전에 완전통일을 내다보고 접근하려는 세칭 「남북교류」의 점차적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것은 남북간의 장벽을 일조에 전면적으로 철폐하려는 것이 아닌 「단계」성을 지적했으며 「인도적 전지」를 들었다는 사실에서 최초에는 비정치적 문화교류」부터 착수되리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조건은 북괴에 대해 단순히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추

상적으로 수락하라고 촉구하지 않았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바로 「한국문제를 취급하는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것 역시 북괴로서는 김일성체제가 존속되는 동안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김일성집단은 물론 「유엔」의 헌장 자체는 인정하고 존중하나 그 한국문제토의와 결정은 「무용하며 무효」라고 대내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이다. 그들의 논거는 「유엔」이 이른바 「미제의 조선침략도구」로 전락했으며 한국전쟁 당시는 교전의 「일방 상대자」였다는데 있다. 어쨌든 이 둘째 조건도 6·25 전범자인 김일성 퇴장후에야만 비로소 북괴에 의하여 그 수락여부가 재검토될듯 하다.

다만 그 경우에 우리측 상응조치가 국제외교무대에서의 북괴상대 대화 및 동석 가능성으로 시사되었다는 점이 전향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 그리고 「유엔」에서 동석한다면 다른 곳에서 동석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서 북괴에 대한 「선의의 경쟁」 호소는 장기간의 평화공존을 전제로 착상된 것이라고 보게 된다.

요컨대 「8·15 선언」은 비록 선행조건제시가 있기는 하나

- (1) 남북한간의 비정치적 문화교류, (2) 국제무대에서의 직접대화의 가능성, (3) 장기 평화공존 가능성을 내다보게 한 문제제기가 뚜렷하다.

### 3. 단계설정과 객관적 조건

평화통일 접근노력의 단계설정은 논리적으로 고찰한다면 ① 긴장완화 ② 대화 전개 ③ 교류 및 협력의 진전 등으로 되리라고 내다볼 수 있다. 그러나 상황변화에 따라서는 그 순서가 어기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컨대 남·북간 긴장상태의 격화에 즈음하여 국제적인 대북피전쟁억제가 주요하고 그 대신 남·북 양자가 어떤 국제외교무대에서 직접 대화를 개시하도록 종용받을 수도 있는 터이다. 그러한 대화 후에는 이러저러한 규모의 남북문화교류가 곧 착수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리라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긴장완화 다음으로 남북교류가 개시되는 것이 순리겠으나, 객관적 조건의 압력여하에 따라서는 남북교류를 오히려 선행시킴으로써 긴장완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평화통일접근의 단계설정은 「궤상의 논리」로 급과속조입을 자부할 수 없으며 신축성과 기동성을 지닌 것으로 되어야 좋을 것이다. 이러한 국면을 염두에 두면서 필자의 평화통일 접근을 위한 단계설정 고찰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 ① 긴장완화의 제도화
- ② 남북간 직접대화 「루트」의 개설
- ③ 비정치적(또는 최소정치적) 문화교류부터 시작하는 남북교류의 단계적 발전
- ④ 협력의 개시와 점차적 확대

⑤ 남북간 국가연합형태의 모색 내지 형성

⑥ 보복 우려없고 체제차 접근시 종국적 통합위한 총선 실시

우선 첫 단계인 긴장완화 제도화부터 고찰해 나가야 할 것이다. 8·15 선언은 북괴의 무력사용 및 폭력혁명론 포기에 관한 선언, 실증을 한국정부와 「유엔」이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북괴측은 일시적 위장전술을 쓸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일단 긴장완화 조치를 취했다가도 후에 그것을 표변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리하여 우리측은 국제적 판시리에 그것을 제도화할 방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북괴의 도전적 자세의 변경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경세력들인 소련·중공의 동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 정세의 본질적양상은 국토양단선을 사이는 남과 북의 두개 3각관계 배치의 국제로 설명된다. 북방 3각관계는 북괴, 소련, 중공의 3각군사동맹에 얽혀있고 남방 3각관계는 한국·미국·일본의 3번유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70년 10월 정제 1각에서는 「미·소·일·중공등 4개국  
가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공동으로 보장토록 요구할 것」<sup>(8)</sup>

---

주(8) 야당인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의원이 1970년 10월 16일 기자회견에서 발설한 것. 후에 신민당은 <4대국에 대한 전쟁억제 보장요구>는 비록 당정책이기는 하나 5년 내지 10년 앞을 내다본 장기적 정책포석일 따름이라고 해명하였다.

이라는 이른 바 「4대국보장」를 거론한 바 있어 큰 말썽을 빚었다. 그것이 장기적인 정책모석으로서 착성된 것이라면 계속적인 연구과제라고 불만도 하다. 그러나 당면정책으로 안이하게 실천하려 든다면 다음과 같은 실점 내지 위험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미국 여론은 보장교섭을 명분삼아 한국의 군원증액요구를 외면하려 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소한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일본은 대공교섭을 구실로 중공 뿐만 아니라 북괴에도 가일층 접근하려 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한국이 일본과 북괴의 사이틈에 끼인 존재로 될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소련은 4대국보장 요구에 응할 경우 틀림없이 미·일에 대해 한국에 대한 군사·경제원조의 중단을 요구할 것이며 또 주한 「유엔」군 전면 철수를 주장할 것입니다.

넷째, 중공은 모택동, 임포 지도체제가 존속되는 한 한국측의 그러한 요구를 미·소·일에 동조하면서 받아들여주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한국정부가 만약에 그러한 정책을 공식화한다면, 한국은 「유엔」의 보호권외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여섯째, 여타국가들은 또 그러한 국세를 한국의 북괴에 대한 상대적 약세와 위기감의 증거이라고 간주할 것이며, 따라서 국제지위의 격하가 우려되게 마련입니다.

나아가서 4대국보장은 한국인의 통일회원에 대한 반영구적인 장애의 가중과 정식화로 될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한국분단이라는 「현상통결」의 보장이라는 외외의 사태가 빚어지겠기 때문이다.

그나마 4대국에 의한 전쟁억제보장은 북괴측의 정규전 전면발동이나 억제하는데 유용할 따름이지, 북괴에 의한 비정규전 내지 「인민전쟁」 도발을 막아내는 데는 거의 무용할 것이다. 북괴는 그들의 무장공비를 남한에 투입하면서도 그것은 「남조선혁명세력의 길기」일 따름이라고 강변해 왔던 것이다.

한편 소련의 국가적 행동생태에서는 그 「보장」이나 「약속」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 예컨대 소련은 1945년 8월 미·영등 주선으로 중화민국과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장개석 총통 영도하의 국민정부가 전 중국에 걸쳐 유일한 통치권력을 수립하는데 대한 지지와 보장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는 중공에 의한 국민정부전복을 고무, 원조했으며 드디어 모택동의 혁명이 본토에서 성공하자 그들과 더불어 1950년 2월 새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45년 조약은 폐기한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소련이 일본과 체결했던 불가침중립조약(1941년 4월)을 배신, 그 유효기간인 1945년 2월 「얄타」에서 미·영과 더불어 대일참전을 약속했던 사실도 상기할만 하다.

그러나 소련과의 관계에서는 「조약」보다도 이해관계의 결부와 「힘 관계」의 설정을 일깨워야 할 것이다. 우선 인내성있게 우리의 대소관에 보는 「비적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인데, 그것도

미·일을 통해서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한편 중공에 대해서는 모·임 체제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미·일을 통해서도 관계개선의 주선을 바라서는 안 될 것이다.

거시적으로 말해서 4대국보장이란 통일달성 시기에나 현실성과 영위성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 이전의 4대국보장의 추진이란 국토양단의 고정화를 초래할 따름이며, 당장 한국의 국제지위를 약화시킬 우려가 큰 것이다.

물론 북괴의 무력적화통일 시도를 제어하기 위한 폭넓은 외교활동의 전개는 지금부터 착상,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긴장완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우리측의 군사, 외교적인 실력축적과 북괴측의 가능한 내부변화에 전주어 적당한 시기에 북괴·쏘련간 그리고 북괴·중공간에 존속하는 이른바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폐기를 요구하는 「소극적」 형태부터 착수해 나가는 편이 유리하리라 생각된다.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응관계를 염두에 둘 수 있지만 그것은 공산권의 동맹 조약에 비해 손색이 뚜렷하며, 또 한·일간에는 유사한 안보협약조차 맺어진 것 없으니 우리는 「소극적」요구를 통해 적극적 이득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교역개시 및 확대노력도 객관적조건에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경제적 실리가 별로 없더라도 경제공존을 통한 정치적 이득을 감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극적으로는 국제사회일부의 그릇된 한국관 측,



「극우 폐쇄국」이니 「죽 계조류 외면」 자어는 「호전국」 등 인상을 불식하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의한 대북정지공작상 「루트」 확대를 내다볼만 하다.

#### 4. 남북간 직접대화 「루트」의 개설

이것은 판문점의 존재양식문제와 직결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53년 7.27 휴전을 전후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시청속에 판문점의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대좌하는 주인공은 「유엔」군측을 대표하는 미국군인과 다른 한편 북괴대표들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 경우에 북괴는 자기들만이 「코리언」을 대표하여 「미제」와 맞선다는 식의 인상을 퍼뜨림으로써 북한주민과 외국관광객들의 현실인식을 오도, 한국(남한)을 주체성없는 소위 「괴뢰」라고 선전하여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얻었던 것이다.<sup>(9)</sup>

이 참을 수 없는 현상은 더 이상 종전의 타성에 내맡길 바 아니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병력감축이 1970년 7월 5일 정식통고된 이후로 155「마일」에 걸친 한국휴전선 방위는 점차 완전 「한국화」추세를 내다보게 하는 상황변화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박대통령의 「8·15 선언」이 평화통일접근구상에서 북괴를 상대로 한 대화가능성을 시사했으니 더욱 과거의 「불상대」 「불대

---

주 (9) 판문점의 종래 존재양식과 휴전협정전문은 대한공론사(판), 판문점 13년, 서울, 1966을 참조.

과]의 방침은 오래도록 지속할 바 아니다.

한편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앞으로 남·북한이 「동시 초청」된다는 경우를 상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형세가 빚어진다고 할적에 「유엔」은 결국 직접대화의 종용이라는 방법으로 「입씨름」을 일단 중지하려고 할 공산이 크다고 보게 된다.

물론 판문점의 군사정전위원회는 오직 휴전협정에 관련된 문제만을 다루는 까닭에 정치성을 띤 문제들은 각기 「그 정부에 건의」한다는 합의를 선언할 따름이다. 이에 앞서 1953년 휴전협정 체결 당시 한국정부는 그 협정에 서명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측 대표는 장차 주역구실을 하더라도 본국정부 아닌 「유엔」군을 대표해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표권분쟁은 실질적인 사정변경 앞에 대수로운 장애로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차피 판문점에서의 남·북회합은 그 명칭과 더불어 기구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절차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될 경우라면 남·북의 대표가 우선 제3국에서 회담을 개시하고 나서 판문점에 신기구를 상설하는 방법도 있다.

1946년의 미·쏘 공동위원회 방식을 염두에 두면서 서울과 평양을 쌍방대표들이 서로 내왕케 하는데 부수되는 이해득실은 간단히 결론짓기 곤란하다. 전통적 수도 서울이 남한에 있다는 우리의 이점을 활용, 북한대표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북괴대표들은 그들의 동정 및 발언에 관한 완전한 보도개방을 요구할 것이며 또 일반민중들에게 선동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측정된다. 그러므로 초창기 직접대화의 장소로는 제3국을 거쳐 판문점으로 옮겨오게 하는 정도가 타당할 것이다.

직접대화시에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될 것은 대표진입선이다. 무엇보다도 지금껏 자유우방이나 비동맹국에 파견되어온 외교관형으로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공산당의 권력구조와 그들내부의 미묘한 「힘 관계」의 변화 생리 그리고 공산당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단체와 공산군 동향을 파악 내지 조종할만한 자질의 소유와 용의가 아쉬운 것이다. 하기야 소위 「전문가」란 대부분의 경우 그 지식이 전문화되어 시야의 폭이 협해질 수 있다. 또 군사전문가는 문제를 비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에는 도리어 무익유해한 존재로 전략활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른 한편 공산권(북괴)의 대표진은 ① 당에서 파견된 통제 및 감시책임자 ② 대남공작 또는 남한연구 전문가 ③ 외교관 ④ 군사전문가로 구성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당간부」들이며 그들나름의 「이론적」소양이 있는데 바로 그 「이론」이 미묘한 분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인적사항 식별상 중시할 기준은 ① 「평화공존」론에 대한 태도 ② 계급관과 민족관인데 후자는 출신성분 및 개인역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공존」론은 오늘날 「스탈린」파와 「현대수정주의」파로 대별된다.

「스탈린」파 그의 후진지역 세자들(예컨대 모택동과 김일성 등)

의 견해에 의하면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불가피적이며, 그러한 상황속에 평화를 쟁취하려면 「제국주의」와 「반제노력」간의 「힘 관계」에서 「제국주의」의 행동을 분자유하게 만들 조건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① 「사회주의진영」의 단결과 강화 ② 「민족해방투쟁」의 앙양 ③ 「제국주의」의 내분과 노동운동의 격화를 부채질 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그들의 근본입장은 대결속의 유리한 조건형성이 곧 평화공존인 셈이다.

그러나 「호루시초프」 등장후의 소위 「현대수정주의」 관점은 이와 다르다. 「제국주의」가 존속하더라도 전쟁은 능히 회피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을 확고히 보장하는 길은 제국주의진영내부의 이른바 「양식파」(또는 비둘기파)를 키워주고 「완고파」(또는 매파)를 고립시키는데 있다고 본다. 나아가서 「비둘기」파가 득세하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마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불필요한 자극은 삼가야 한다는 행동방침이 도출된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 가운데서 「스탈린」주의자와는 오직 「힘 관계」의 인식을 일깨울 수 밖에 딴 도리가 없을듯 하다. 그러나 「현대수정주의파」의 태동이 그들 내부에서 불가피적인 시대추세라고 관찰되는 이상 이러한 경향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파와는 분별해서 덜 타격주는 방향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른바 「제국」의식을 민족적 관점보다 앞세우려는 골수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많은 수요가 아니다. 그러나 민족파는 공산권내에서

아직껏 감시대상이 신세를 면치 못한다. 직접대화에 임한다고 할  
적에 민족과들 그들 내부에서 불리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간접적으  
로 키워나가는 방책을 신중히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직접대화는 어떤 제3자가 주선할 것인가. 70년 봄 일본  
의 아이찌외상은 한국의 국회의원을 만나 일본이 남북대화를 주선할  
용의가 있음을 비쳤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일본통치의  
불쾌한 기억이 결부됨으로써 한국인의 민족감정을 손상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일본인들이 그러한 역할을 병자하여 「두개의 한국」론  
을 내걸어 소위 「두다람 걸치기 외교」를 전개할 가능성도 있어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남북대화 개시의 주선은 이미 시사한 것처럼 ① 「유엔」에 남  
북한이 동시초청될 경우라면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② 차선지책으로서는 4대국 공동주선의  
방식도 상정할 수 있겠다.

##### 5. 남북교류에 관한 논의와 자세의 변천

「프랑스」의 「루이·돌로」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  
문화기구)가 1963년 3월 20일자로 각국정부에 대하여 「정치관계  
가 악화하여 긴장이 조성되더라도 문화교류는 계속 발전시키도록」  
권고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10)

주 (10) Louis Dollot, Les Relations Culturelles Internationales, 일역본, 삼보원 (역),  
국제문화교류, 동경, 1965, p. 45.

그러나 그 자신도 인정했듯이 「비록 정치관계와 문화교류는 분리하는 것이 이상이지만 하나 사실은 그것과 달라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그대로 문화적 영향력도 가졌다」<sup>(11)</sup>는 국면을 도외시킬 수 없다.

따라서 엄격히 말한다면 문화교류에 관해 완전한 「비정치적」 성격을 운위하기는 곤란하고 아마도 「최소정치적」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다. 더구나 공산권에서는 문학예술창작활동의 전 분야에서조차 「당성」이 강조되는 실정이다.

그럼더라도 비정치적인 문화교류분야의 탐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언어학 분야를 들 수 있다. 「스탈린」조차도 「맑스주의와 언어학의 제문제」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 언어의 초계급성을 인정했었다. 고고학에서의 탐구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특히 자연과학분야에서는 비정치적 학술연구를 입문할 여지가 많다.

지금까지 한국(남한)정계에서 논의되어온 남북교류의 항목에서 두드러진 것은 인도적견지에서 이산가족을 위한 서신교환 남북면회소의 설치, 기자교류, 체육교류 등이었다. 그나마 1970년 박대통령의 「8.15선언」이 발표되기 까지에는 획기적인 「대담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북괴측 남북교류 제안과 앞으로의 가능한 「세스처」를 측정케 할 그들나름의 비정치적 국제문화교류 내지 협력의 기구부터 검토

---

주(11) Ibid.

해 보고자 한다.

북괴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1956년)이후의 결정서에 나타난 해당항목은 다음과 같다.

※ 「노동당」 제3차대회 결정서

...남북조선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연계와 남북간의 왕래 및 통신 교환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 그러기 위하여 우리들은 남북간의 접촉을 추진시키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남북통일문제에 이르기까지 토의하여 그의 실제적대책을 취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한다. (12)

※ 김일성의 「연방제통일방안」(1960년 8월 14일자)에 나타난

해당부분의 골자

- ① 「어떠한 외국적 간섭도 없는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할 것.
- ② 아직 남조선당국이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제의한다. (즉 남북 조선에 연준하는 정치제도를 두고 양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양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한의 경제, 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한다.)
- ③ 만일 상기 제안등을 남조선당국이 동의지 않는다면 남북

---

주 (12) 조선 노동당 제3차 대회 문헌집, 평양, 1956, pp. 394.

실업계 대표로 구성되는 순전한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할 것.

④ 남북조선 문화사절의 내왕과 과학,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를 다시 한번 제안한다……」<sup>(13)</sup>

※ 「노동당 제4차대회 결정서(1961년 9월 17일자)는 약한다.

(강경일변도의 혁명로선에의 전환으로 남북교류 언급없음)<sup>(14)</sup>

※ 「뉴욕」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통일전선 위원장 고병철에 보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인사들의 회답서한(1970년 6월 3일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는 지난 20여년동안 시종 일관하게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는데 합당하고 현실적이라고 인정되는 온갖 방도와 대책을 다 강구했다.

……여기에는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통하여 단번에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는 방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중간걸음을 거쳐 점차 완전한 통일애로 접근하는 방도도 제기되어 있으며, 남조선당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통일문제와는 관계없이 분열로 말미암은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련의 인도주의적 조치라도 취할 구체적 방안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의 역대 위정자들은 이 모든 것을 덮어놓고 반대하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하여 매번 침략적 도발행동으로 대답

---

주 (13) 박동운, <북한>의 자주로선과 통일정책, 아세아연구, 제XI권, 제1호, pp. 10-1.

(14) Ibid., p. 20.



였다.

……원래 협상과 교류는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쌍방의 합의와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또한 평화통일을 하자면 그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남조선의 매국정권은 미제의 지시밑에 자유로운 남북조선 총선거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남북조선 연방제도 반대하고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과 무력축소도 반대하고 경제, 문화교류와 인사내왕도 반대하고 남북조선대표들의 접촉과 협상도 반대하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조치로서 제기한 남북간의 편지거래까지도 한사코 반대하며 도대체 통일축전에 도움 되는 어떠한 제안이든지 모두 반대했다」(15)

……오직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쫓겨시키고 일본군국주의 세력의 재침책동을 꺾어 버리며 박정희 매국정권을 뒤집어엎고 애국적인 민주주의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야만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16) 운운.

※ 북괴 「노동당」 제5 차대회 (1970년 11월 2일~13일) 결정서약. 이것 또한 남북교류는 언급치 않고 (1) 폭력을 통한 남조선혁명과 「인민정권 수립」 (2) 남북의 두개 공산정권의 평화적 통합이라는 2 단계 적화통일전선을 운위하는데 그쳤다.

---

주 (15) 평양방송, 1970년 6월 3일자

(16) Ibid.

이상과 같은 흐름을 요약하건대, 북괴는 남북교류를 마지 그들의 전매특허마냥 선전적으로 제외해 오다가 1961년 5.16 혁명을 분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로는 「교류무용」적인 강경한 폭력혁명로선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 배경사정으로 지적할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1960년을 북포년도로 삼았던 북괴 5개년계획의 완수로 소위 「혁명기지」의 전제북구가 일단 타설으로써 내향적인 준비기 또는 휴식기가 지나갔다는 것.
- ② 1961년 한국(남한)의 5.16 혁명에 즈음해 소위 「북진 위업」대응을 구실삼아 소련·중공에 애걸해 북방 3각군사동맹을 체결했으나 그 명분을 살려야 하는 동시에 강경정책에도 뒷받침이 생겼다는 타격.
- ③ 한국(남한)의 반공태세가 재정비 강화되는데 따라 북괴의 종래 「평화공세」는 거의 무용의 것으로 되어 버렸다는 인식.
- ④ 중·소분규의 심각화에 따라 북괴는 주체념계 소위 「투쟁을 통한 단결외복」을 구상한 것. 아울러 원조도입을 위한 「채스처」
- ⑤ 북괴 내부의 사상적 혼란을 수습하던 또 7개년계획(1961년 ~ 67년)이 실패하여 3년연장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따르는 주의외전책.

한편 한국(남한)의 경우는 60년대 경제건설에서의 고도성장, 국제지위의 계속향상, 자주국방의 일깨움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성

립을 지적할 수 있겠다. 바로 그 자신이 「8.15 선언」과 같은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통일접근노력의 수행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요컨대 남과 북의 역량대비가 마침내 한국(남한)에 유리하게  
전변됨에 따라 평화통일접근노력의 「이니시어티브」는 우리측이 장  
악하는 바로 되어가고 있다. 다른 한편 북괴는 그 초조감의 보  
상작용으로 소위 「강경」 로선으로 전락해가는 추세를 드러내고  
있다.

어차피 김일성 「스탈린」주의체제의 퇴장을 기다려야만 본격적인  
직접대화도 남북간 장벽의 단계적 제거작업으로서의 남북문화교류도  
현실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 지금은 그 거시적 준비작업으로서의  
정책포석을 폭넓게 연구해 나갈 단계이다.

#### 6. 남북교류의 문제양목

비정치적(또는 최소정치적) 남북교류의 개시를 상정할적에 어  
떤 종류의 것을 어떤 순서로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우선 지금까지 남·북한에서 거론된 교류의 항목부터 정리·요약  
하고자 한다.

(가) 서신교환

(나) 남북면회소 설치

(다) 기자교류(방송 청취 자유화, 신문 통신의 지국교환설치 포함)

(라) 체육인 교류

(마) 언어학, 고고학 등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세부야등 비정치적인

학술교류

(바) 국제기구회의 및 국제경기에의 공동참가

(사) 남북간 물자교역과 기술교류

(아) 예술교류

(자) 친위방문

(차) 친위안부조사통보

(카) 관광자유화

(타) 시찰단교환 내지 종교인교류

(파) 각종 사회단체 또는 청년학생층의 회담, 교환

— 이상에서 예거한 것은 모두 박대통령의 「8.15선언」에 시사된 바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항목인 것 같다. 한편 앞서 인용한 바 북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회한에서 이른 바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조치」와 「통일축진에 도움」되는 것 등의 취지로 이루어 그들이 마다 할바도 아닌상 실다.

그러나 긴장완화라는 내전제, 선행조건없이는 애당초 착수되지도 못할 것이다. 이어서 그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순서와 방법을 그릇지면 전진 아닌 후퇴가 초래되리라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실패작으로 들것은 1960년 4.19 의거 후 1961년 봄까지에 걸쳐 한국(남한)의 대학생 일부가 추진하려 했던 「남북학생 회담」 또는 「관문점으로의 행진」 계획 등이다. 이것은 선행조건



이는 누구도 직장·거주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게다가 북괴「안전기관원들」의 잔인·협량한 습성이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공작임무를 띄지 않은 면회소행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재북친위들에게 인도와 어긋나는 막중한 정신적 고통을 부하하게 만들 것이다. 따른 한편 한국(남한)의 경우를 보더라도 개방사회임에도 가족중에 월북자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즐겨 공개하려고는 하지 않는 실정임을 알아야 한다.

남북간의 물자교역과 기술교류로 말하면 그것은 벌써 경제협력 영역에의 진입을 의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공과 밀착한 아세아공산주의자들은 「정경불가분」을 완고하게 주장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경제협력은 남북교류의 피안에서나 논할 성질의 것이다. 하기야 8·15 해방 후 한동안 1940년대에는 남과 북이 특허상사 또는 「특수상인」을 통해 어류, 미곡 등 1차산물과 수공업제품 등을 물물교환하다싶이 한적도 있었다!<sup>(17)</sup> 그러나 분단 4반세기를 경과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은 ①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을 많이 일탈하게 되었으며, ② 서로 다른 경제협력권에 편입되었고, ③ 산업구조도 해방전과는 판이하다. 남한의 농업, 경공업과 북한의 중화학공업이라는 밝은 대조 도서는 한국공업화 이전의 옛이야기에 불과하다.

주 (17) 미군정치하의 상당기간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전력공급을 유상으로 받아온적 있었으나 북괴는 1948년 5월 14일 돌연히 대남송전을 중단했던 바 그 동기는 명백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예술교류는 인간사회의 심적 상호작용을 일깨우고 친화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하는 바 크다고 인정된다. 특히 양단된 남과 북의 주민사이에서 고전예술을 교류하는 것은 민족문화유산의 공유를 재확인시키는데 공헌이 클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레파토리」가 「전설일가」 따위가 아닌 「춘향전」 능이고, 가장 애송되는 시가 또한 해방전 시인인 김소월의 작품이라는 사실도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그것은 소련의 「베스트·셀러」가 아직껏 「레오·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나 「부활」 능이라는 점을 관련적으로 상기케 한다. 공산당이 온갖 교화수단을 총동원하고서도 지금껏 아니 영원히 말소시키지 못할 것은 다름아닌 「인간성」인데 이 인류공통의 「인간성」은 예술작품에서 끝내 소탕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 1956년의 「헝가리」의 거라든지 19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 자유화운동에서 예술문화인들이 공산당 압계를 반대하는 항거의 선두에 섰음을 기억한다.

그러나 공산당은 한사코 예술의 본질을 사회적 생산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또 예술, 문화인들이 비교적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도록 「국가」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언제나 당의 통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공산당은 가장 비정치적이어야 할 예술을 항상 「정치행태」에 두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감안할적에 예술교류는 비록 남북 문화교류의 중요하고도 불가결의 항목이기는 하나, 초창

기 교류에서 무턱대고 먼저 개척할바로는 되지 않는다.

「친위방문」의 이실득실 또는 문계점은 서신교류의 경우와 대차 없을듯 하면서도 남한인원이 직접 북괴 통계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험성은 남북면회소 이상으로 오히려 확연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안부조사 의뢰의 「케이스」는 그 자체가 교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제적십자사 개입리에 남북쌍방의 적십자사의 기능과 역할을 향상시켜 주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비정치적(또는 최소정치적) 문화교류의 첫 단계에서 선뜻 착수할 수 없는 몇개 항목에 걸쳐 그 착잡한 문계계기를 개관했었다. 그러나 모든 항목이 죄다 경계대상으로 이지는 않는다. 위축, 퇴영자세에만 젖어 있다면 통일문계의 현실적인 본격화에 즈음해 우리측이 「이니시어티브」를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

#### 7. 비정치적 문화교류의 선봉철 기자·언론 교류

긴장완화와 직접대화 「루트」의 개설에 이어 착수될 남·북간 문화교류의 첫 단계에서도 우선순위가 부여될 것은 세칭 「기자교류」 즉, 「저널리즘」의 상호교통이다. 진리는 간단화된다고 하지만, 타진과 이해의 선행없이는 본격적 처방이 불가능한 법이다.

정책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기자교류의 선행은 한국(남한)에 상대적우리를 헤아리게 한다. 외국의 실리와 경험도 일깨워주듯이 자유국가와 공산국사이의 기차교류는 후자가 두려워하는 바이다.



그 근본이유는 자유개방사회와 폐쇄사회의 성격차로 설명된다. 그리고 인간인 이상 어느체게하에서건 사람은 「알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며 환경적응에 앞서 환경인식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경험도 마찬가지이다. 8·15 해방 직후의 한동안 남북 왕래가 펴 자유로웠을 무렵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저널리스트」들의 남하와 서울집중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날도 남한의 「매스·미디어」 간부진에 북한출신이 많은 것은 그 실증으로 된다. 「저널리스트」는 그 기질과 사회적 기능발휘를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언론자유를 찾으며, 그들의 광활한 활동무대는 바로 개방사회이다. 우리 남한은 비록 경계적처우에 미흡한 점이 있을망정 북한에 비하면 언론인의 낙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또 언론인의 민주수호와 반공의식을 충분히 믿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 남·북의 언론인들은 저극히 대조적인 「작풍」 차를 느끼게 한다. 남한의 언론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현상의 「부적적」 측면이 야말로 솔깃한 「뉴우스·텔류」가 있는 것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비판적 정신」의 전통때문이며, 또 신생국에서의 「자유」 개념은 권력에 대한 비예속 내지 항거에서 정립된다는 사고방식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18)

---

주 (18) 박동운, 신문자유와 윤리문제 (신문학보 제 1호, 1960년 4월) 참조.

신생국 정치풍토에 보는 <인텔리>들의 야당성향에 대한 연구논문으로는 필자의 Authoritarianism and Democracy in Korea, Korean Affairs, vol. III, No. 3 (December 1964) 소개논문 참조.

다른 한편 북괴 언론인들은 「당」 명도하의 건설상에 보는 「공정적」 측면만이 「뉴우스·벨류」를 지닌 것처럼 훈련되어 왔으며 또 규제되어 있다.

그러한 「작풍」 차를 지닌 언론인들을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한다고 할적에 어떠한 현상이 예견되는가. 우리 (남한) 언론인들은 북한에 갔을적에 절대로 공산당의 소위 「안내관광」에 현혹되는 따위의 피상적관찰을 일삼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막」을 꿰뚫으려고 애쓸 것이며 북괴의 「부정적」 측면을 주로 골라서 「뉴우스」화하려 할 것이다. 그것은 훈련없어도 기자생리상 필연시 된다. 다른 한편 북괴측 기자가 남한에 나온다면 저쪽에서 순화된 작풍과 남한의 자유분위기 틈바구니속에 어리둥절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소위 「낭성」과 「자유에의 의지」의 갈등을 가누지 못한채 자기의 자세부터 탐구해야 할 판이다.

하기야 공산당의 언론정책도 과소평가할바는 아니다. 그들은 「레닌」이 강조한 바 「신문은 집단적 선전자, 집단적 선동자일뿐만 아니라 집단적 조직자이기도 하다」는 제강을 일관해 왔다. 그러나 공산신문의 선전, 선동, 조직이라는 3대기능은 북한외 「매스·미디어」에서나 통용될 따름이며, 그들이 남한에서 「매스·미디어」를 직접 운영못할 남북문화교류의 초창기 단계에서는 별로 걱정할 것이 못된다. 현재 북한신문을 판치고 있는 남한사정에 대한 애곡, 악선전에 상도한다면 그곳 기자들이 이곳을 직접전문케 하는 바가 도리어 보도의 행간에나마 자유의 입김을 넣어주는 면에서 유리할 것이다.(19)

주 (19) 필자, 공산주의사회에서의 저널리즘의 위치 (사상계, 1961년 11월호) 참조.

한편 자유 개방사회의 신문은 보도와 논평(향도)을 신문의 으뜸가는 양대기능이라고 보며, 또 그 기본자세에서는 객관성과 속보성을 중시한다. 이에 반해 공산신문은 ① 「당성」의 원칙 ② 「진실성」의 원칙 ③ 「당적 영도성」의 원칙을 기본입각점으로 삼는다. 말하자면 당에 유리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어긋나지 않고 당의 노선에 부응하는 것만이 보도와 논평이 될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공산신문은 바로 그 제약성 때문에 신선미 없고 무미건조하여 일단 자유개방사회의 신문과 더불어 독자앞에 구독경쟁을 벌인다면 공산주의자들의 패배가 명약관화한 일로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남북간의 북파원 교류에 이은 신문·통신사의 지국설치 상호인가의 경우도 당환을 면치 못할 것은 우리측이 아니라 북파측이라고 내다 보인다. 물론 북파의 신문등이 남한에서 자유판매된다면 일시적이거나 호기심과 연구의욕등의 작용으로 상당부수가 보급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것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공산신문의 간행이 자유화된 선진민주국가의 실정을 보더라도 「붉은 출판물」의 보급이란 한도가 있다.

하기야 우리나라 실정은 선진국의 「케이스」로 유추될 바 아니라는 우려도 있음직하다. 그러나 우리국민의 교육문화수준을 자비해서는 안되며 또 1인당소득도 실질적으로는 북파를 능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언론의 자유화를 가장 두려워할 것은 언제나 독재·폐쇄사회측이다. 김일성 자신이 「남

조선혁명의 앞길에는 많은 난관과 장애가 가로 놓여 있다」고 고백하면서 소위 「미계」와 「국내 반동의 집결처」를 지적한데 이어 「남조선에서는 반공사상이 뿌리깊이 박혀 있다」<sup>(2)</sup>고 개탄한 사실은 흥미있는 일이다. 그는 또 사상사업에 언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식 생활양식」의 남한에서의 보급과 북한침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남북간 방송청취의 상호 자유화는 북괴를 그야말로 당황망조케 할 따름이지 우리에게서 새삼스럽게 불리를 논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북괴 공산당국은 그곳 주민들의 남한방송 청취를 막고자 야비하게도 「라디오·다이알」을 평양만을 향해 고정시키고 있지만 남한에서는 북괴방송을 개인적으로 청취하는 사실상의 자유가 누구에게도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한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북괴방송이 「판이 박은듯이」 단조롭고 흥미없다 하여 별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

언론의 존재의의를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실천해온 우리의 장점은 남북 문화교류의 첫 단계에서부터 훌륭히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 8. 남북교류의 단계적 발전방책

기자교류와 「매스·미디어」의 보도 및 보급자유와 상호보장에  
곧이어 착수할만한 것은 체육인교류이다. 그리고 해방후 오늘날까

---

주 (20)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1965년 4월 14일자)

지 체육인의 동태를 볼적에 월남은 많았으나 월북은 거의 없었다. 체육인들은 인공적 규계를 싫어하며 그를 자신의 건강에 어울리는 자유활달한 심성의 소유자들이다.

국어의 표기와 문법구조를 다루는 언어학자들과 고대사·고고학분야의 교수들의 교류는 비정치적인 공동연구의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수긍될 수 있다. 또 이러한 인문계 학자들의 사고는 주지하듯이

「민족주의적」이며 통일접근의 바탕을 형성하는데 도움될만 하다.

자연과학계의 연구교류도 그 학자들은 「계급적」 규계를 받지 않으려 하는 만큼 우려될 것이 없다. 우선 의학에서부터 착수하는 것이

인도적견지와 한국(남한)의 장점을 살리는데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인문·자연과학계의 학술교류는 그대로 협력에 직결될 수 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사회과학계는 복귀의 의식적이며 정치적인 사

상침투공작의 주요한 무대이기 때문에 내중으로 미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체육·학술교류가 개시되고 나면 거의 시간적간극을 두지 않고 국

계경기 및 국제학술회의에의 공동참가문제가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그 마당에 대표될 것은 단일한 「코리아」이며 외국인들은 남과 북

의 성문비율에 그다지 관심을 돌리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때야

말로 한국(남한)은 통일주체다운 관용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그레이트·브리튼」의 완전통합도 「인그랜드」가 총회의 주체임에

도 「스코트랜드」에 대해 최대의 아량을 베풀었으며 또 「런던」의

궁전전위병에 「스코트랜드」 병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토록 확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술교류는 민족문화유산의 공동계승이라는 견지에서 고전 또는 민속무용 내지 국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어서 해방전의 예술창작으로 옮겨갈 수 있으며 현대예술은 대중에 늘려야 한다.

그러한 단계에 이르면 남북쌍방의 관광자유화가 별로 저항없이 실현될 수 있겠다. 꿈속에도 그리던 고향의 명승과 농산어촌을 상호 관광하게 된다는 것은 분단의 고통을 크게 덜어주게 될 것이다. 또 관광자유화의 실현은 자연스럽게 친척방문의 숙원을 풀게 될 것이고, 아마도 월남파월민의 경우는 공산당에 의해 여지없이 파괴·변모당한 고향산천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적색「테로」를 확인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사태발전은 한국(남한)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리라고 판단된다.

관광자유화는 시찰단파견의 교환과도 직결된다. 그리고 남북간의 문화교류가 이 지보에 이르면 종교·포교활동의 자유화를 우리측이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괴입장을 가장 난처하게 만드는 것으로 예측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괴 김일성 일당은 6·25 동란 이후 북한지역에 단 하나의 교회·사찰도 남기지 않고 모주리 파괴 또는 접수해 버렸다. 북괴는 오직 국토양단·남북교통차단조건하의 대남공작 수요상 평양에 기만적으로 몇 개 종교단체 간판을 보존해 두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공산치하의 주민일수록 포교 자유만 인정된다면 급격히 종교신앙에 정신적 안식처를 찾으려는 성향이 확연될 소지가 많다. 가혹하기 그지없는 환경속에서 마음의 의지를 구하려는 갈망이 내면적으로 한사코 언젠가 타오를 불씨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수록 공산당은 포교활동을 적대시하게 마련이다. 종교인교류를 여타 문화교류의 뒤로 미룬 까닭은 여기에 있다. 우리의 통일전략상 북괴가 다시는 역전뿔시킬 손쉬운 기성사실을 축적하고 나서 제기할 문제이다.

×            ×            ×

이 논문은 평화통일접근 노력의 일환으로 박대통령의 8.15 선언<sup>1)</sup>에 시사된 바 남북간의 긴장완화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비정치적 문화교류의 문제점과 그 진행순서를 고찰하려 한 것이다. 점차적인 협력의 발전 종국적통일의 달성에 이르는 게 단계의 전략적 포석은 다음 기회에 별고에서 논급할 수 밖에 없다.

끝으로 남북교류의 목적지향성은 다저들 필요를 느낀다. 박대통령은 그것을 ① 인도적 견지 ② 통일기반조성에의 기여로 풀이했다고 해석된다. 여기에서 「인도적 견지」란 분단에 따르는 고통의 경감을 뜻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기반조성에의 기여」란 평화적 민주적으로 한국(남한)주체·북한동포해방방식의 민족통일 완성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을 생각해 한다.

어차피 평화통일 접근노력의 현실적인 본격화는 1970년대 후반  
기부터의 일이라고 예측된다. 긴장완화의 선행없는 남북교류한 한  
날 감상적공론에 지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북한지도층의 인적구  
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세의 유리한 배합이라  
는 객관적 조건의 작용이 또한 중시되어야 한다.

이어서 남북교류가 본궤도에 올라 거래의 문단에 따르는 교통이  
뚜렷이 경감되며 관광자유화라는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할 시점은  
1980년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